

도서관정책 내실화 가능성 보인다

도서관진흥법 제정 따른 후속조치 잇따라... 입법부 인식도 제고

정부가 마련한 도서관진흥법안이 지난 91년 2월 7일 임시국회를 통과해 종래의 도서관법이 폐지되고 도서관 기본법으로 도서관진흥법이 새로이 제정된 것은 우리 도서관 역사를 바꿀만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었다. 새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업무 일체가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지난해 7월 문화부내엔 도서관 정책과가 설치됐고, 금년은 문화부가 계획한 도서관정책의 실천 첫해가 되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띤다. 따라서 이미 세워진 도서관진흥법을 실행에 옮긴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92년의 도서관과 도서관정책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당초 문화부가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관장키로 하면서 밝힌 3가지 주요 사업의 일정은, 첫째 자문기관으로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고 도서관의 설립과 자료의 확충을 위해 문화부장관이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사서중심의 도서관 운영, 다시 말해 공공도서관의 과학적·조직적 운영을 위해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전문직으로 임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기타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 육성을 의무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은 이동도서관 및 대출금고를 설치토록 한다는 것이 도서관정책의 기본골자였다.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사업에 주력

이런 계획 가운데 문화부가 올 한해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역시 공공도서관의 확충사업이었다. '전국 공공도서관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문화부는, 현재 전체인구 16만명당 1개관 수준인 267개관의 공공도서관을 오는 96년까지 163개를 신설해 인구 10만명당 1개관 수준인 430개관으로 늘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에 의해 작년엔 20개관을 착공했고, 금년엔 모두 24개관의 시공을 완료해 내년까지 공공도서관을 311개관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공공도서관의 45% 정도가 연간 자료구입비를 5백만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문화부는 시·도 예산을 적극 도서관에 유치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같은 지방재정 확보책은 93년 정부 예산으로 잡혀 있던 전국 267개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15억원 전액이 경제기획원에 의해 삭감됐고, 지난 10월 2일 국회문공위가 93년 문화부예산 예비심사에서 이상의 금액을 예결

공공도서관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돼 본격적인 정책이 집행된

92년은, 모두 24개의

공공도서관이 새로 지어졌으며,

오는 96년까지 430개관으로 그

수가 늘어난다. 한편 시설확충과 함께

문화학교 시범운영 및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내실을 다진 게

92년 도서관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위로 올렸으나 이 증액분이 확정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부는 서울시회회가 지방재정에서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데 '용기'를 얻어 지역차원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과 함께 문화부가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 사업이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올해만도 8대의 이동도서관차량을 새로 구입했다.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에 나선 이동도서관 사업은 역이나 터미널, 그리고 도서관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을 순회하며, 무료로 도서열람을 하게 하는 것으로, 대형버스를 열람실로 특수 제작해 서가는 물론 열람석까지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항상 전문사서가 동승해 이용에 따른 문의나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독서방법 등을 조언하는데, 문화부는 도서관 부족분의 보완책으로 마련한 이동도서관차량을 오는 96년까지 모두 4백대로 증차할 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의 읍·면회관 등에 있는 작은 도서실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펼쳐졌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도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백여곳의 도서실에 각 2백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해당 지역에서도 같은 금액 정도의 자료구입비 지원을 했다.

시설확충과 관련된 이상의 사업과 병행해 실시한 것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종합문화시설로 확장하는 일. 시·도별로 1개씩 전부 15개의 도서관을 지정해 시범문화학교를 운영한



문화부는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과 더불어 많은 사업을 펼쳤다. 사진은 인천의 이동도서관 차량

것이 대표적인 프로그램. 서울의 중계도서관과 부산의 시민도서관, 대구의 중앙도서관 등을 선정해 주부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비롯해 서예, 꽃꽂이 등 문화강좌를 실시한 것이다.

지방재정 확보 통한 내실화 기해야

한편 문화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대표 도서관 육성책의 일환으로 오는 96년까지 '문헌정보처리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금년에는 국립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을 연계했으며, 내년에는 공공도서관 전산망 실태를 조사해 보급을 지원하며, 현재 38만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중앙도서관의 문헌정보를 천리안 2로만 제공하던 것을 93년 3월부터는 HITEL과 연결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총예산 156억원 정도가 소요될 이 계획이 완성되면, 이 전산망에는 외국 중앙도서관의 정보도 연결되며, 국내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연구 전산망을 비롯해 지역도서관이 확보한 서지가들의 소장서지 정보 등도 포괄돼 도서관의 전국적인 정보망이 완전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이상과 같은 도서관의 3대요소인 시설과 자료, 직원에 대한 문화부의 도서관진흥방안 실천의 제약은 뒤편에도 예산이다. 따라서 정부와 각 시·도의 예산확보 여부가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사립도서관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불이익 제거를 추진해온 문화부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사립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은, 도서관행정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일로 환영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치의 실질적인 효력발생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처럼 낙후된 우리의 도서관에 대한 개선과정은 그만큼 길고 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까다로운 작업에 대한 몇가지 제언이 최근의 도서관 관련세미나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서울시립공공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정필모교수는, "서울의 경우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 1백 57억원 가운데 75.5%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수는 "지난 91년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은 공공도서관운영비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임의조항으로 뒤 실효성을 잃고 있어, 강제규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2회 전국도서관인문모임에서 주제 발표한 전주대 유형승교수도 "공공도서관이 발달된 국가들은 지방세 중 일정한 비율을 도서관 운영비로 할당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도서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자체시대에 걸맞는 제도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새로운 도서관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던 91년의 연장선상에서 올리는 기틀을 다지는 한해였고, 내년 또한 일보전진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태원 기자